

## WTO의 체제구축과 그 영향

溫基云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시멘트 산업에 있어서의  
무역 장벽 완화는 우리가  
수출상대국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른  
시장잠식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1993년말 UR협상 타결이 일단락되고 작년부터 이 협정에 근거하여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했다. WTO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조직의 구성, 회원국 확대, UR 후속협상의 추진, 새로운 통상 이슈 논의 등 신뢰성과 실효성을 갖춘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체제구축 작업을 벌여 왔다.

동체제에 참여한 국가들은 협정체결시 제출한 양허안에 따라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의 교역과 관련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산품 및 농산물의 국내시장 개방폭을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한편, 국가간의 이해대립으로 대부분 후속협상으로 미루어진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시장 개방조치를 취했거나 앞으로 더욱 높아질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WTO의 체제 구축과 이에 따른 각국의 시장개방 확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산물이나 금융, 유통, 기본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내시장 개방에 따라 적지 않은 파급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 효과 우려

우리나라는 UR협상과정에서 농산물 이행계획서를 놓고 미국, EU 등과 막판까지 논란을 벌였다. 94년 3월에 제시된 최종 이행계획서에는 일부 품목의 관세 인상과 국영무역, 종량세 등 개방에 따른 보호장치를 추가하였으나 국별 검증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국들의 강한 반발로 일부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종 이행계획서에 대한 각국의 반발은 우리나라

가 과거 이행계획서에는 없었던 국영무역 및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종량세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되었고, 개방 품목의 관세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양자간 협상을 통해 국영무역 및 종량세 대상 품목의 축소 등 이해당사국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우선 쌀의 경우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며, 10년차 되는 해에 관세화 여부를 재협상하기로 하였다. 유예 기간 중에는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여 1995~1999년은 국내소비의 1~2%, 2000~2004년은 2~4%에 해당하는 최소 수입규모를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보리, 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은 1995년에 관세상당치를 부과하여 전면 시장을 개방하되 관세 상당치는 10년간 10% 감축하며, 이 기간중 국내소비의 3~5%에 해당하는 최소 수입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쇠고기는 수입제한 조치를 1997년 6월에서 2000년말까지 연장하되 수입쿼터를 설정하며, 쿼터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일단 인상했다가 2004년까지 40%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997년 7월부터 수입을 자유화하되 양허관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농산물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농산물시장을 꾸준히 개방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저렴한 외국 농산물을 국내로 유입시켜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산물의 국내생산을 위축시키고 농촌경제를 허약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 수입자유화가 실시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나 수입자유화 여부와 관계없이 쌀수입에 따른 영향은 커지게 될 것이다. 재협상 결과 관세 상당치에 근접한 높은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계속 수입을 제한하는 대신 최소수입 물량을 확대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쇠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농가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개방시기 및 쿼터 물량 등을 감안할 때 시장개방의 영향이 여타 농산물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개방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책을 면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UR협상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접근 최소물량의 효율적 수입관리방안과 저렴한 외국농산물의 유입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방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농업의 구조적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유통업 완전 개방으로 타격 우려

UR협상 과정에서 유통이나 금융서비스 분야는 각국의 낮은 양허수준으로 협상타결에 난항을 거듭하였다.

유통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도매, 소매, 중개, 프랜차이즈 서비스 등 4개업종에 대하여 최종 양허하였다. 양허안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국내 유통시장은 완전 개방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유통시장은 국내업체들간의 제한된 경쟁에서 벗어나 국내외 유통업체들간의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동안 소규모로 국내시장에 진입하였던 외국 유통업체들은 이제 점포를 대형화·다양화 하면서 국내로 진출할 것이다. 외국업체들은 자국에서 익숙한 할인 신업태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소비자 기호도 유사한 일본 유통업체들의 국내진출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유통업체들은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대도시와 신도시에서 점포개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네덜란드의 마크로와 프랑스의 카푸는 내년의 점포개설을 목표로 건물을 신축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낙후되어 있으며 독과점적 유통구조와 높은 유통마진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 유통업 개방에 따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유통업체의 상업자본 및 인력이 새로운 경영 기법을 갖추고 국내시장에 진출할 경우 전체 업체의 40%를 차지하는 생계형 영세 유통업체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 유통 업체들은 자신들의 매장을 자국 상품 위주로 갖출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유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와 물류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업체 스스로도 체질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매장 규모의 대형화와 협동조합의 구축, 벤더업·전문 양판점 개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금융 산업의 체질 여악에

UR 금융 협상은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일본, 한국, 아세안 등 주요 관심 대상국에 대한 양허수준 제고 요구로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UR 협상이 종료된 후에 추가적으로 후속 협상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작년 7월 UR이 개시된지 9년만에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협상타결에는 최대 금융국인 미국이 빠지고 EU, 일본, 한국, 개도국 등이 공동보조를 취한 불완전한 그리고 잠정적인 타결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정은 금년 8월부터 정식 발효되어 1997년말 까지 17개월동안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협정 참여국가들은 발효기간 중 미국을 협상무대에 끌어 들여 완전하고 항구적인 협정을 만들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미국이 협상탈퇴를 선언한 배경에는 미국이 금융시장 개방 정도가 부족한 개도국들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가 아닌 쌍무간 협상을 통하여 개방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시점에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겠다

는 장기적 구상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과 함께 타결 막판 시한에 금융자유화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WTO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예금, 대출, 금융리스, 지급 및 송금 등 14개 업종에 대하여 양허했고 화폐증계, 금융정보 등 2개 업종은 양허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 협상 타결에 따른 양허안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OECD 가입을 앞두고 OECD 자본 자유화 규약을 수용해야 하는 2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다자간 협상에서 이탈한 미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관심 대상인 1인당 주식투자 한도 확대, 투신 및 투자자문업의 실질적 개방, 신상품 도입 자유화 등을 놓고 본격적인 쌍무협상 압력을 가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자체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증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제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선, 금융산업의 건실성 확보 등이 중요하다.

## 기본통신협상 타결로 개방 가속화

각국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UR 최종 합의안에서 제외된 기본통신시장 개방 문제가 최근 후속협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정 시한인 금년 4월까지 타결될 전망이다.

후속협상의 쟁점사항에는 ①사업자수 및 외국 출자 제한의 철폐 또는 대폭완화, ②사업허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규제 완화, ③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전문분야에 내외국인 차별 철폐, ④상호 접속의 보장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1998년부터 유무선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33%까지 허용하는 단계적 개방

계획과 함께 개방 대상을 위성통신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로 확대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양허안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방폭 확대를 적극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개방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국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대외 개방 속도를 늦추는 반면 국내 개방을 서두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것이며, 충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PCS, TRS, 무선데이터 통신 등 신규 서비스 사업자 선정과 향후 통신서비스 경쟁 규칙이 궁극적으로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기반이 되는 기간 통신망의 이용과 다양한 통신망간 접속도 대외개방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시멘트 산업의 개방에도 대비해야

시멘트 산업은 이미 국가간에 협상이 마무리된 공

산품 분야에서의 무역장벽 완화 내지 철폐 조치에 의해 국내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시멘트는 공급능력 확충에 비하여 내수가 더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수입규모가 수출규모를 웃도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멘트 산업에 있어서의 무역장벽 완화는 우리가 수출상대국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른 시장 잠식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조달 협정의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들은 외국업체들에게 조달시장을 국내업체와 동일하게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멘트, 유리 등 비금속광물도 300억원 규모의 국내시장이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추산) 따라서 국내 시멘트 업계는 생산능력의 신속적인 조정과 아울러 제품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